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복지공약 제안서

2020. 03.



주 관 |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

참여기관 | 금이성마을

세종우리요양원

세종주거복지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자원봉사센터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복지관

영명보육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세종특별자치시협회

(사)세종특별자치시시각장애인연합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복지공약을 제안하며

[행정수도 완성·행복도시 세종]이라는 표어를 바탕으로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세종시 출범 당시 인구는 11만 5천 명 수준이었으나 7년 8개월 만인 2020년 3월 현재 35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매해 10% 이상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세종시는 인구 증가율만큼 다양한 복지 욕구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복지 정책 및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사회복지는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사회적 투자’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다양한 논의와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저출산·고령사회화의 급속한 진전, 기존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한계, 일자리 확충이라는 상황적 요청 속에서 정책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투자’는 ‘사회서비스의 확대’ 보단 거시적 전망에서 사회적 투자를 강조하는 예방적 사회서비스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 정책 방향의 흐름과 급변하는 세종 인구 증가율에 적합한 복지 정책 및 인프라 구축이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한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협의회는 행복도시 세종 완성을 위해 관내 120여 개 사회복지 유관단체의 의견을 청취·조율하여 각 당과 출마자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 복지공약을 본 책에 수록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우리의 정책 제안을 복지공약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세종시민이 품격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조성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여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CONTENTS

I 세종특별자치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공통 영역 제안 / 01

공통영역

- 세종시 관내 기초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증설 3

II 직능 단체별·사회복지기관 복지 증진을 위한 분야별 제안 / 05

시설공통

- 사회복지시설 수도요금 감면 7

아동복지

- 보호종료 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8

노인복지

- '100세 마을 안심 주택 만들기' 주거 복지 프로젝트 9

장애인복지

- 장애인 이동권 보장 11
-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인프라 구축 12
- 중증장애 영·유아 전담 및 통합 보육시설 증설 13
- 민관협력 사례관리 인력 배치 14
- 시각장애인 안정적 일자리 보장 15
- 장애인이 살기 편한 세종 만들기 16
- 장애인노인 재활서비스 제공 기관 확충 17
- 출소자 취업정책 마련 18

종사자처우개선

-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9

I

세종특별자치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공통 영역 제안



정책제안명 | 세종시 관내 기초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증설

■ 정책공약 제안 배경

- 2018년 6월 기준 세종시 30만 인구 중 주요 보장급여수급 및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대상자 53,000여 명(출처:제4기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본 책)
- 읍면지역 사회복지대상자 21,000여 명, 동지역 32,000여 명
- 저소득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기초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관내에 각 1개뿐
- 저소득층의 푸드마켓 및 기초푸드뱅크 이용 편의 제공

■ 정책공약 필요성

- 관내 수급자 9,700명의 중 개인은 약 723명(12,974회) / 시설이용 70개소(4,200여 명/ 2,185회)가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이용하고 있음
- 사회복지대상자 거주지역이 읍면지역 39%, 동지역 61% 거주
- 기초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조치원에 병합형으로 1개소만 있어 신도심 이용자들이 불편이 매우 큼
- 또한 17개 광역자치시도 중 기초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운영시설 수가 가장 적음

(2019.12 기준)

구분	광역 푸드뱅크	기초 푸드뱅크	푸드마켓
서울	1	5	30
부산	1	18	16
대구	1	12	8
인천	1	12	14
광주	1	15	2
대전	1	12	8
울산	1	7	2
경기	1	73	17
강원	1	21	1
충북	1	26	5
충남	1	20	6

구분	광역 푸드뱅크	기초 푸드뱅크	푸드마켓
전북	1	18	7
전남	1	25	3
경북	1	21	3
경남	1	20	4
제주	1	2	2
세종	1	1	1

정책공약 주요내용

- 세종시 신도심 내 기초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증설

기대효과

- 기부자에게는 잉여제품 처리 비용 절감 및 세제 혜택
- 이용자에게는 생필품 지원을 통한 절대빈곤 문제 해결
- 신도심 대상자의 편리한 푸드마켓 이용

II

직능 단체별·사회복지기관 복지 증진을 위한 분야별 제안



정책제안명 | 사회복지시설 수도요금 감면

■ 정책공약 제안 배경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 2항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수도요금 감면대상이지만,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조례에는 사회복지시설 감면 해당 내용이 없음

■ 정책공약 필요성

- 세종특별자치시 여러 분야에 복지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수도요금 감면이 필요함

■ 정책공약 주요내용

- 타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수도요금감면이 세종시에서는 복지정책과, 여성아동 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소 건강증진과, 상수도과에서는 운영비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어 지원이 어렵다고 함
- 전국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운영비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세종시만 감면이 어렵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에 부족한 운영비 사용하던 공공요금을 감축하여 이용자들이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

정책제안명 | 보호종료 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 정책공약 제언 배경

- 2020년 1월 기준 서울 외 9개 시도에서는 보호종료 아동 주거지원 통합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음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주거지원, 주거환경조성,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등이 지원됨
- 세부내용으로는 임대주택 지원,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전, 가구 지원, 전문 사례관리사의 주기적 상담 및 자원 연계, 매월 20만 원 상당의 자립 경비 지원 등이 제공
- 세종시 관할 아동보호시설에서는 연평균 3명의 아동이 퇴소하고 보육시설 소속 자립요원이 연평균 15명의 사례를 관리함
- 세종시는 현재 자립요원 1명의 인건비만 지원되고 자립요원 활동비나 퇴소 아동의 자립 경비 지원 등의 지원이 전무한 실정임

■ 정책공약 필요성

- 퇴소 후 혼자 살아가야 하는 퇴소 아동의 불안한 심리와 훈련 되지 않아 자립생활이 미숙한 상태로 퇴소하여 안정적인 사회인이 될 때까지 재정적, 심리적,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
-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보호종료 아동 주거지원 통합 서비스를 실시하고 서울 외 9개 시도에서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 세종시는 제외되어 있음
- 행복도시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정책공약 주요내용

- 보호종료 아동 주거지원 통합 서비스 사업에 세종시 참여
- 보호종료 아동 체계적 사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전담 기구 편성

■ 기대효과

- 보호종료 아동에게 안정적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사후관리를 지원하여 성공적 자립에 기여

정책제안명 | '100세 마을 안심 주택 만들기' 주거 복지 프로젝트

■ 정책공약 제안 배경

- 2018년 6월 기준, 세종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8,155명
- 전체 노인 인구의 66.5%는 읍면지역에 거주
- 노인 인구 내에서도 전기 노인(65~74세) 인구가 많으며, 전체 노인 인구의 54.0%를 차지
- 5세 이상 후기 노인 비율은 10.3%로 전기·증기 노인보다 비율은 낮으나, 매년 그 비율이 증가
- 또한 2018년 6월 기준, 세종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6,211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 중 22% 차지
- 독거노인은 읍면지역에 전체 독거 노인의 79.5%가 거주
- 독거노인 수는 매년 약 300명씩 증가
- 급증하는 노인 인구의 증가 폭을 고려하여 노인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지원 체계 마련 필요

■ 정책공약 필요성

- 세종은 도농 복합 지역으로 동지역은 젊은층, 읍면지역은 노인층이 많이 거주함(세종시 전체 평균 연령 36.6세 / 읍면동 평균 46세)
- 읍면 지역은 독거노인, 고령화된 장애인 가구가 많고, 대부분 노후화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신체기능이 약화하다 보니 일상생활의 위험에 노출되어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입식 부엌이나 수세식 화장실, 욕실, 채광, 조명, 냉난방 시설, 창호 교체, 핸드레일, 단차 제거, 미끄럼 방지 등 가구별 안심을 위한 집수리와 노인 신체기능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요망됨
- 마을 내 독거노인, 고령화 장애인 세대는 겨울철 동파, 노후화된 보일러, 배관 수리 및 교환, 노후화된 기름통 교체, 난방 배관 이물질 제거 등 겨울철이면 난방기 걱정으로 힘들어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난방 점검 서비스하지 못함
- 이에 원 도심 지역 고령화된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주거 환경 개선 및 안심주택 조성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과 서비스가 시급히 요망됨.

■ 정책공약 주요내용

- 원 도심 지역 고령화 주민 맞춤형 주거복지 ‘내 집 설계하기’ 프로젝트
- 편안하고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택 수리 및 주택관리 시범 사업
- 겨울나기 보일러, 배관 수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 추진
- 난방점검 서비스 교육을 통한 우리 마을 자가 점검 활동 추진

■ 기대효과

- 단독세대 주거편의시설 및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지역 주민의 자가설계 참여
- 주택 수리와 편의시설 설치로 인한 주거 만족도 증진 및 에너지 절감 향상
- 난방점검 서비스 교육을 통한 우리 마을 자가 점검 및 어르신 일자리 연계

정책제안명 |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정책공약 제안 배경

- 세종시가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장애인 인구도 계속 늘어나 2019년 10월 현재 12,600여 명에 중증 장애인만 4천여 명이 넘음
- 이는 세종시 전체인구 35만 명의 3.6%에 해당
- 비장애인보다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 이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다각적으로 필요함
- 저상버스, 교통약자 콜택시, 장애인 리프트 차량 등 다각적인 이동권에 대한 적극적 제도개입을 요청함

■ 정책공약 필요성

- 장애인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통해 사회적 편익의 증가
- 세종시 현재 저상버스 67대로 전체 버스 대비 23% 비율 차지
- 서울시 2018년 10월 기준 저상버스 보급률 43% 볼 때 세종시는 서울의 50% 이하
- 세종시 읍면동별로 전체 장애인의 57.7%가 읍면지역, 42.3%가 동지역 거주
- 읍면지역 도로 특성상 원도심에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워 저상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이동수단 도입 필요

■ 정책공약 주요내용

- 저상버스 보급률 확대
- 원도심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콜택시 증차, 리프트 차량 도입 및 보급 확대
- 장애인 셔틀버스 증차 및 노선 확대
-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수리 및 구입 지원 제도

■ 기대효과

-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의 참여 기회 확대
- 경제적 활동의 기회 확대를 통한 경제적 자립 증진

정책제안명 |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인프라 구축

■ 정책공약 제안 배경

- 위기 및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되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 전국 100여 개 이상 운영 중
- 세종은 단 한 개소도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주 보호자 입원 및 질환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세종의 발달장애인은 필요한 경우 타지역 보호시설에 의뢰

구분	전국	세종	비고
단기보호시설	103	-	중앙협회 회원시설기준
주간보호시설	480	2	중앙협회 회원시설기준

■ 정책공약 필요성

- 발달장애인 가정에 발생하는 돌봄 부재 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의 특성, 정도, 상황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하여 단기간 가족 부재가 발생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임시 보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 경감과 위기 장애인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

■ 정책공약 주요내용

- 발달 장애인 단기 보호 기관 설립
- 지역사회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발달 장애인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위탁 홈스테이 구축
- 세종시의 여건상 두 가지의 시설이 별도로 운영될 경우 효율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을 듯 하지만 두 기관을 통합 운영할 방법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을 듯함.

■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들의 장애 특성 및 정도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킴

정책제안명 | 중증장애 영·유아 전담 및 통합 보육시설 증설

■ 정책공약 제안 배경

- 세종특별자치시는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되어 2019년 3년 차 사업이 시행
- 현재 세종 지역 내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부강면에 1개소뿐으로 장애 영·유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장애전담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서비스를 대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증설이 필요함
- 장애·비장애 아동 통합보육 시설은 세종시 전체 7개소 운영(6개소 신도심, 1개소 조치원 소재)

■ 정책공약 필요성

- 장애전담어린이집의 증설을 통한 장애 영·유아의 재활 훈련 및 성장발달 지원
- 장애·비장애 아동 통합보육 실시를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사회 공동체적인 의식을 조기에 수립

■ 정책공약 주요내용

- 권역별 장애전담어린이집 증설 (원도심, 신도심)
- 장애·비장애 아동 통합보육 시설 증설

■ 기대효과

- 장애 영·유아의 재활 훈련 및 성장 발달 지원
- 양육자(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사회적 활동의 기회 마련
- 장애·비장애 통합 교육을 통한 장애 인식 개선

정책제안명 | 민관협력 사례관리 인력 배치

■ 정책공약 제안 배경

- 법적근거 : 장애인 복지법 제 3조의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중심의 지자체 상담·사례관리 등 전달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민관 협력이 강화됨
- 장애인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복지관 인력배치 시 사례관리 인력이 우선 증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시군구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복지관의 사례관리 인력(민관협의체 업무 등)을 우선 증원(2명)

업 무 명	장애인복지관		
	도지역	광역시	서울특별시
사례관리	3명 → 5명	3명 → 5명	4명 → 6명

-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 통합적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될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참여 강화

■ 정책공약 필요성

- 민관협력 사례관리의 전달체계 강화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정책공약 주요내용

- 민간기관(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 전문 인력 추가배치

■ 기대효과

- 장애인의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사례관리 지원

정책제안명 | 시각장애인 안정적 일자리 보장

■ 정책공약 제안 배경

- 2018년 6월 기준 세종시 시각장애인 인구 1,093명
- 세종시 시각장애인들은 국가 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세종 내에 자격증을 이용하여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 타지역으로 가서 일을 하는 형편

■ 정책공약 필요성

- 새로운 분야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공공영역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배치하여 시각장애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 필요
- 또한 기업들에게도 제도를 소개하여 장애인 고용과 직원복지의 두 가지 효과 기대
- 이미 타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세종시에 없는 안마바우처 사업 도입 필요

■ 정책공약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이동, 편의시설, 정보접근)보장
 - 1) 공공기관에서 시각 장애인 안마사를 배치
복합, 종북, 보건소, 체육센터 등 공공기관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두어(직접 고용/파견)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경제적 안정 도모
 - 2) 지역 내 기업들에 헬스키퍼 고용 촉진 안내
지역 내 기업들에 시각 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하여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복지에 기여하고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경제적 안정 기회를 제공
 -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하나인 바우처 안마를 시행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경제적 지원이 되고 지역주민들은 적은 비용으로 안마를 받고 건강 관리가 가능

■ 기대효과

-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경제적 안정
-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

정책제안명 | 장애인이 살기 편한 세종 만들기

■ 정책공약 제안 배경

- 2018년 6월 기준 세종시 등록장애인 11,080명으로 세종시 전체 인구의 3.7%
- 2018년 4월 복지부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 5%
- 전국 평균 대비 세종은 등록장애인 수가 현저히 낮은 편임
- 이는 부족한 정책, 시설, 프로그램 등으로 이주를 꺼리기 때문으로 보임
- 장애인이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고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책들이 개발되고 환경이 조성되고 시행되어야 함

■ 정책공약 필요성

-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장소에서든 장애로 인한 불편이 없어야 함
- 세종시는 특성상 새로 형성되는 신도심과 구도심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지역임
- 새로 조성되는 신도심에는 도시 계획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에 아주 유리한 환경이므로 초기에 조기 도입이 필요
- 장애인 인구가 신도심보다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원도심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이 더욱 필요

■ 정책공약 주요내용

- 장애인 중심 정책 기준 선언
- 장애인복지 통합 체계 구축
- 장애인 친화 도시 선포 및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조성
- 공공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 기대효과

- 장애인 권리 보장하고 행복한 삶 보장
- 세종시가 세계 최고 포용복지 도시로

정책제안명 |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기관 확충

■ 정책공약 제안 배경

- 세종시는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에 따라 재활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치료서비스가 원도심에서도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2023년 장애특화형 종합복지센터가 건립 예정됨에 따라 장애인 전연령의 욕구에 적합한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됨
- 읍면 농촌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인구는 전체 장애 인구 중 43%에 육박(2018.12 기준)
- 그러나 원도심에는 장애 노인에게 적합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 매우 부족
- 지역·연령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이 매우 불균등하게 제공되고 있음

■ 정책공약 필요성

- 고령화로 인해 신체·인지 기능이 퇴화하는 과정에서도 잔존기능을 유지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을 통해 고령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장애에서 오는 좌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애 노인을 위한 재활서비스 확충이 필요
- 원도심 내 장애인복지관이 1개소 밖에 없어 장애 노인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
- 더욱이 1개소밖에 없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공간 및 인력 부족으로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시간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장애노인이 재활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상황은 재활서비스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

■ 정책공약 주요내용

- 원도심내 노인장애인 특화 재활서비스 기관 확충
- 기존 노인/장애인 복지관 내 장애인 재활시설 및 인력 확충

■ 기대효과

- 장애 노인의 신체·인지 잔존기능 유지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증진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하고 재활치료 서비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정책제안명 | 출소자 취업정책 마련

■ 정책공약 제안 배경

- 국내 형사 정책은 처벌과 엄벌 위주로 처벌 뒤에는 사회일원으로 생활
-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매년 22%를 상회
-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취업이 어려워 생활고에 시달리다 다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음
- 일반 교도소 출소자 중 24.7%가 3년 이내 재범 (2017년 법무부 통계자료)
- 출소자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법무보호공단의 지원을 받은 1만 980명의 출소자 재범률은 2017년 기준 03.0%(36명)에 불과

■ 정책공약 필요성

- 안정적인 직업과 생활이 출소자들의 재범에 상당한 영향
-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 재범은 100조 원에 달함 (형사정책연구원)
- 재범률이 1% 낮아질 때마다 사회적 비용은 연간 903억 절감
- 재범 방지에 대한 적극 지원 및 홍보로 매년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

■ 정책공약 주요내용

- 출소자 쉼터
- 일자리 지원
- 심리치료 지원

■ 기대효과

- 출소자들의 재범 예방 및 성공적 사회 복귀로 사회적 비용 감소

정책제안명 |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정책공약 제안 배경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은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우 보장이 매우 중요함
- 이를 위해 국가도 지난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당연한 권리로 인정함
- 그러나 통계청은 2018년 한국 전체 노동시장에서 전년 대비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이 보건·복지서비스업으로 발표
-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전달 가능

■ 정책공약 필요성

-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동일 사회복지시설 직종 내에서도 차이가 발생
-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불공평 등은 종사자의 이직률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과 질을 저하하는 원인으로 작용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보수체계와 봉급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 규정에 대한 법률 개정 필요
-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다른 부처 소관 사회복지시설 역시 보건복지부 국고지원시설과 마찬가지로 지방분권시설에 비해 인건비 편차가 큰 상태임
- 이에 동일한 직무나 시설유형별로 상이한 보수체계로 인하여 격차 발생
- 따라서 지원방식 및 소관 부처별 임금 격차에 따른 사기 저하 및 형평성 문제 심화

■ 정책공약 주요내용

- 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수립으로 시설·유형 별 임금 격차 해소
- 복지 포인트 및 특별수당 도입으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복지 종사자 교육 체계 강화로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시설 교육 부담 경감
- 소진 완화를 위한 장기근속 휴가제 도입

■ 기대효과

- 복지종사자 적정 임금보장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서비스 질 확보
- 복지종사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복지종사자 삶의 질 향상으로 세종 사회복지에 활력 조성
- 복지시설 종사자 근무개선으로 시민에게 행복한 복지서비스 제공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복지공약 제안서

